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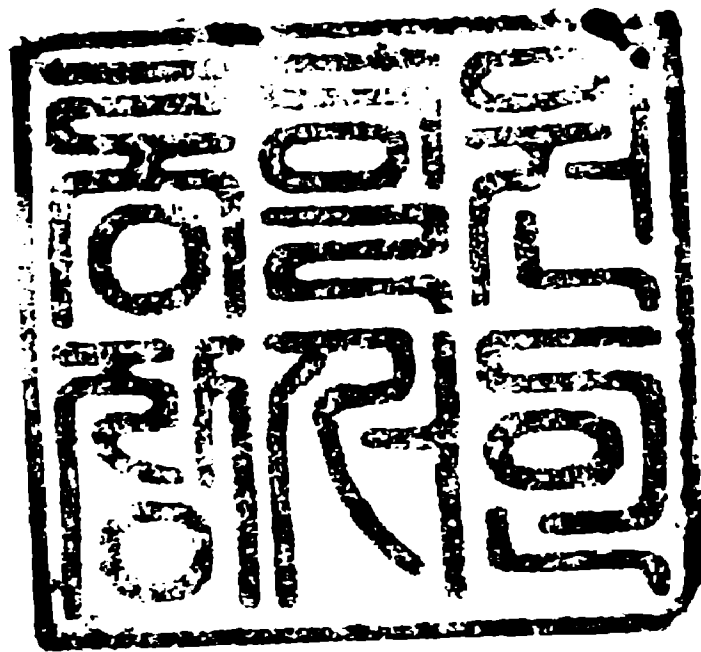
통일정책 해설자료 / 199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렇게 통일하자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렇게 통일하자는 것이다



통 일 원

목 차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 현실로 다가온 통일 -
어떤 통일의 길을 갈 것인가? / 3
 -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어떻게 통일하자는 것인가? / 6
 - ▶ 이 통일방안은 어떤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인가? / 20
 - ▶ 이 통일방안의 특징은 무엇인가? / 22
- 〈부 록〉**
-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대통령 특별연설(전문) / 29
 - ▶ 북한은 어떤 통일을 주장하며
우리의 통일방안과는
어떻게 다른가? / 49

◆ 현실로 다가온 통일— 어떤 통일의 길을 갈 것인가?

둘로 나누어진 조국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며 과업이다.

우리는 분단의 고통 속에서 40여년을 살아오는 동안 나라의 통일을 한낱 마음 속으로 염원하고 입으로만 외치는 것으로 여겨 왔을 뿐 눈앞의 현실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80년대말에 이르러 통일문제는 당위와 관념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바로 오늘과 내일의 현실문제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감이 없지 않다.

그것은 국내적으로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기 시작한 민주화 열기와 통일에 관한 관심의 고조, 정부의 북방정책 및 전향적 통일정책 추진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화해·협력의 시대적 조류와 함께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처지의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이나 남북예멘의 통일과정을 지켜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 곁에 다가온 현실—남북의 통일을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룰 것이며 어떤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이것은 곧 통일방안에 대한 온 겨레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온 겨레가 뜻을 함께 하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안출해 내는 일이 바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속에서 40여년간을 살아오는 동안 남북간에 쌓여진 불신과 적대감을 씻고 훼손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7천만 겨레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함께 보장되는 통일된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우리가 밝아 나가야 할 통일의 절차이자 방향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1988년 7월 7일에 있었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과 같은 해 10월 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 그리고 1989년 8월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대내외에 천명한 새로운 통일구상들을 바탕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고 다듬어서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어떻게 통일하자는 것인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골자는 자주·
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
의 중간과정을 거쳐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
장되는 통일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것
으로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 나갈 통
일의 기본원칙과 과정, 통일된 조국의 미래
모습 등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통일의 원칙 우선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지녀야 할 우리의 기본입장과 자세로서 자
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고 있
다.

여기서 자주란, 통일은 결국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문제이므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겨레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의 당사자끼리 서로 협의하여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십여년전 우리 겨레를 남북으로 갈라 놓은 것은 분명히 강대국들이었다. 그렇다고 오늘에 와서 강대국들에게 우리를 본래대로 되돌려 놓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또한 간청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이룩하지 못한 통일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자주원칙이 국제사회에서 문을 똑꼭 걸어 잠그고 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쇄국주의나, 지금까지

지 유지되어 온 여러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끊고 선의의 도움조차 거절하는 ‘폐쇄적 자주’를 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음 평화란, 아무리 통일이 민족 지상의 과제이고, 오늘을 사는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염원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족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같은 겨레끼리 피흘리며 싸움하고, 지금까지 쌓아 온 민족의 생활터전을 축대밭으로 만들고 말 전쟁이나 폭력을 사용한 통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사를 내외에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6·25’라는 처참한 민족적 비극을 이미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민주란, 통일을 이룩하는 모든

과정이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실현한 뒤에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인간답게 살 자유와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민주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민주 의 참뜻은 우리 민족을 이루고 있는 7천만 동포 모두에게 통일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통일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계급’ (무산계급) 만이 모든 것을 독재해야 된다는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에서 말하는 민주 와는 그 뜻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의 과정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로 가는 중간 징검다리로서 남과 북이 연합(남북연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단일 민족사회를 꾸린 다음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민족국가(통일민주공화국)를 세워 통일을 이 땅에 실현한다는 점진적인 통일에의 접근과정을 밝히고 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40여년간을 지나오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 대결하고 적대하는 관계를 쌓아 왔다.

뿐만 아니라 성질이 전혀 다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란 두 사회로 나뉘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탓으로 남북의 한 겨레는 서로 살아가는 방법과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정마저 적지 않게 달라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갈라진 채 서로 달라진 민족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두고, 하루 아침에 휴전선만 터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곧바로 이룰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한반도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면서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민족사회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바탕을 점차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민족끼리 비록 당장은 합쳐 살지는 못하나마 서로간에 막혀 있던 문을 활짝 열고, 왕래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넓혀 나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사회, 문화, 경제 등의 각 분야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다시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키워 나간다면, 머지않아 정치적으로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이와 같이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를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모두가 바라고 있는 단일민족국가로의 통일

이 당장 이룩되지 못할 바에는 7천만 민족이 그동안에 겪어야 하는 갈라진 삶에서 오는 고통과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훗날의 통일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분단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민족 전체의 이익과 장래를 위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북연합체제 구축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같은 완전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에서 분단의 오늘을 잘 보살피어 나가면서 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과도적인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의 발족을 제안하고 있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다같이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공존 공영의 관계를 만들어감과 아울러 서로 달라진 민족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터전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잠정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남북연합』이 발족되면, 남과 북은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 ‘연합’의 형태로 서로 손을 잡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인 바, 이때 남북한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상의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 연합체제 아래, 안으로는 남북 상호간에 생기게 되는 이해관계를 비롯한 주요 문제들이 협의 조절되고, 밖으로는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서로를 헐뜯고 쓸데없이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되는 등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연합의 기구 『남북연합』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남북의 수뇌가 만나 상의하는 『남북정상회의』가 두어지고, 쌍방 정부의 대표로 구성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남북평의회』가 설치

된다.

여기서 「남북각료회의」는 남북 쌍방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각기 10명 안팎의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각료회의」안에는 이산가족 재회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비롯하여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상임위원회가 두어지게 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산가족들의 재결합문제와 같은 남북간에 해결되어야 할 모든 문제들과 민족고유문화의 계승 발전방안과 같은 민족공동의 과제 등을 협의 조정하고, 그 실행을 확실히 다져나가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 「남북평의회」는 양측의 국회의원 중에서 같은 수를 뽑아 총 100명 내외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각료회의」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통일조국의 기본설계도라 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헌법안을 만드는 일 외에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

안과 절차를 서로 의논하여 마련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밖에도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들이 합의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는 등 행정적인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실무기구로서 『공동사무처』를 두며, 서울과 평양에는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하여 각기 중앙정부와의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연락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연합』에 두는 모든 기구와 시설은 현재의 비무장지대 내에 적합한 지역을 골라 이를 하나의 『평화구역』으로 지정한다음, 여기에 설치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평화구역』은 앞으로 남북간에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게 될 교류와 협력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여기에 남북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광장, 민족문화회관 등과 같은 남북 쌍방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건설하여 한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키워 나가자는 것으

로서 민족통일의 앞날을 내다보는 큰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통일국가 수립 절차 그러면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를 지나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면, 통일국가는 과연 어떤 절차를 밟아 세우자는 것인가?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맨 먼저 「남북평의회」에서 남북 쌍방의 대표들이 의논하여 통일헌법의 초안을 마련한다. 이것을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으로 확정 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한 전지역에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하나로 통일된 민족국가가 이 땅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남북평의회」가 마련한 통일헌법안을 확정 발표하는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다만 민주적

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기 의견을 달리할 것이므로 우리 통일방안에서는 이것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남북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미루어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실성이 크게 돋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한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이 총선거가 인구비례 방식에 의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선거방식에 의한다는 것인가를 굳이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것 역시 통일의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상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미루어 놓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당면 과제 우리 통

일방안은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하루 속히 만나 남북 협력과 통일의 새 시대를 열 「민족공동체 헌장」을 의논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남북한의 정상이 의논하여 결정할 이 헌장은 단순한 통일의 원칙문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서로의 합의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남북 관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질서와 방향을 정하는 기본규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헌장에는 남북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과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약속을 비롯하여 「남북연합」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 내용이 명문으로 담겨지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는 국회 특별연설에서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

력히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이 같은 해 8·15 경축사에 이어 이것을 북한측에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측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밖으로 개방의 길에 나설 수도 없고, 안으로는 우리측과 교류나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 연합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같이 참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이념과 체제를 가지고 있든 다같이 추구해 나갈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통일된 조국의 장래 모습이 통일민주공화국이라면 이것의 보장이야말로 무엇보다 앞서는 요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이 통일방안은 어떤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인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그리고 있는 통일된 조국의 모습은 7천만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국민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가 고루 보장되고, 누구나 자기의 주위와 주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민주공화체제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통일된 조국은 민족 전체가 좀더 잘 살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

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가운데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서로 돕고 사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특히, 우리 통일방안은 이땅에 오직 하나로 된 민족국가가 민주공화국의 형태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념과 체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라를 하나의 연방이란 지붕 밑에 그대로 존속시켜 나가는 북한측의 연방제방식에 의한 통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통일방안은 이밖에도 통일국가의 국회는 양원제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함으로써 전체 지역간의 균형과 모든 민족구성원의 참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 이 통일방안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쌍방간에 가로 놓여 있는 장벽을 헐고,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아 민족적인 화합을 달성함으로써 민족의 완전한 재통일을 위한 밑바탕을 하나씩 다져 나간다는 점진적 통일에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 우리 정부가 줄곧 추진해 온 통일정책과 기본방향에 있어 큰 차이점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일방안은 그동안의 내외상황

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민족사의 장을 열어 나가고자 하는 제6공화국 정부의 강렬한 정책의지와 함께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여망을 담아 만들어진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과도적 통일체제로 「남북연합」결성 제의

우리 통일방안은 우선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전까지의 남북간의 통일업무를 관장해 나갈 중간단계적 성격의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을 결성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의 하나로 지적된다.

이 「남북연합」은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 아래서 통일이란 목표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불신과 대결이란 험하고 큰 강을 딛고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중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고안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82년도에 발표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도 이러한 중간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간에 「기본관계 잠정협정」을 맺을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안에서는 통일에 이르는 중간 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기구나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구상을 더욱 발전시켜 분단현실의 관리 체제로서 「남북연합」의 결성을 제안하고, 이것에 두는 기구들과 역할도 비교적 상세히 제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남북연합」안에 대하여 북한측은 “두 개 조선을 추구하는 제2의 분열방안”이라고 비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것의 근본 뜻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통일방안이 통일의 중간형태로서 「남북연합」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남북간의 현실상황을 냉철히 생각해 볼 때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현실문제와 장래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것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족통일’을 통한 ‘국가통일’의 실현 우리 통일방안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민족통일’의 과정을 거쳐 ‘국가통일’을 이룩해 나가려 한다는 데 있다.

우리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의식이야말로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뿌리요, 갈라져 있는 남북의 겨레를 다시 묶어 하나로 결합시키는 가장 큰 명분이며, 민족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 가는 힘의 원천으로 보아,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발전을 통한 통일의 길을 찾으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방안이 이와같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란 민족주의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에 세계적인 범위에서 일고 있는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건설이란 시대적 조류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통일국가의 미래상 구체적 제시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된 조국이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외에, 통일이후 국가의 형태와 국회의 구성방법 등에 대한 우리측의 구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방안은 통일된 국가는 단일국가이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2체제, 2정부' 형태의 「고려연방제」 방식과 같은 미완성형 통일을 반대하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체제는 반드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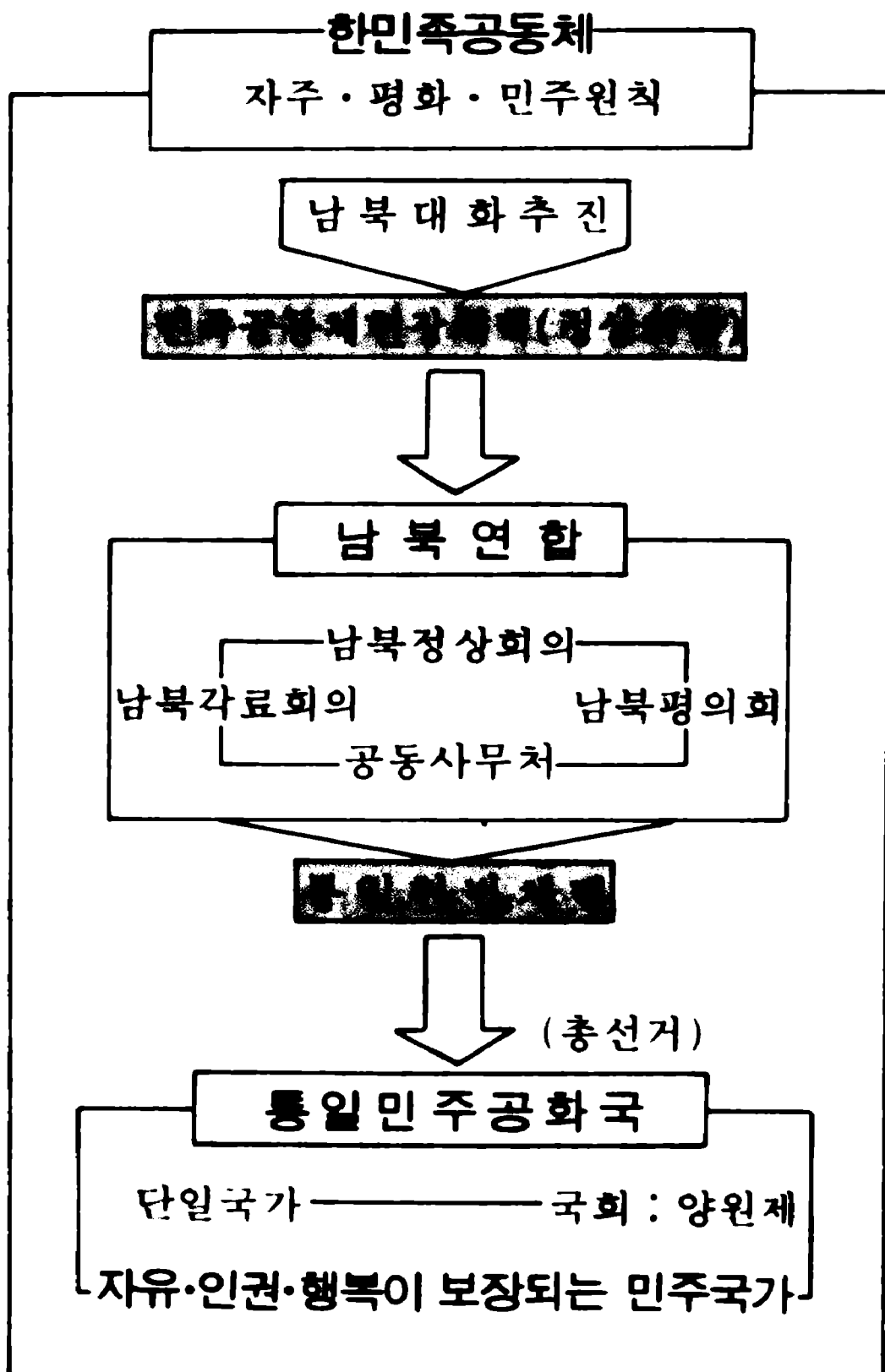
만 된다면 어느 체제라도 좋다는 식의 통일 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을 확고히 배격하고 있다.

북한측 입장과 주장의 폭넓은 수용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입장만을 내세워 북한측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 나간다는 기본정신 아래 지금까지 북한측이 주장해 온 바와 처하고 있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통일방안은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등 『남북연합』에 두는 모든 기구들의 구성을 남북에서 똑같은 수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리 방안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교류·협력문제의 우선적 해결만을 고집하지 않고 북한측이 주장해 온 ‘정치·군사문제’까지도 협의 해결할 수 있다는 폭넓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



부록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대통령 특별연설 (전문), 1989. 9.11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분,

제147회 정기국회의 개회를 축하합니다.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 짓고 희망의 90년대를 여는 뜻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 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 만 우리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

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갯더미 위에서 일어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신흥공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 속에 서울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렀습니다.

동서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 마당에 모인 이 인류화합의 대축제는 국제질

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비켜서 있던 우리 민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같은 성취에 힘입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협력하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일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 체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주었고 그것을 40여 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질서와 힘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거대한 안팎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더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 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세계에 밝혔습니다.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정책은 동서세계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0여년의 세월동안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바꾸어 놓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

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네 번을 거듭하여도 북한을 지배해 온 경직된 체제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이나,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 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분단현실은 이처럼 냉엄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지는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폐쇄노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 지도록 돕고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땀과 인내, 겨레의 슬기와 뭉친 힘이 들어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쏟아 그들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 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

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주의·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고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는 온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조국에서 어느 특정인이 나 어느 집단, 어느 계급도 특권이나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거나 독재로 전횡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

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의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 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간의 유혈투쟁과 6·25 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었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르게 회복·발전시키는 일
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
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
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
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
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
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
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
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
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

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 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 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국호·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 형태는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

법·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 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

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두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지난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년 완전한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켜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천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복수정 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보편적 가치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의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의 길

은 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분단의 장벽이 높고 두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그것을 가시게 하는 데는 우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무한한 참을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니다.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입니다.

민족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반목과 분열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 의지를 창조해 내어야 합니다.

민주 번영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이 더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빛나는 그 날을 여러분과 함께, 7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은 어떤 통일을 주장하며 우리의 통일방안과는 어떻게 다른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란

북한측이 지난 60년대부터 줄곧 내세워 온 통일방안은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북한이 최초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한 것은 1960년 8월 14일 광복절 15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부터이다.

여기서 비롯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그 후 몇 차례 부분적인 수정을 거친 끝에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연설을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 연방제 통일방안의 골자는 ① 남과 북에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 ② 남과 북에 같은 수의 대표를 뽑고 ‘적당한 수’의 해외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이 연방회의가 연방정부격인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상설위원회」가 남과 북의 지역자치 정부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군사권과 외교권을 비롯하여 그밖의 ‘민족 전반적인 이익에 관계되는 사업’을 관할토록 한다. ③ 연방이 성립되면 남북간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의 증대, 민족연합군의 창설 등 「10대 시정방침」을 우선 실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측은 또한 이러한 연방제의 실현에 앞서 ①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적인 악법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 통치기구를 없애야 한다”, ②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모든 인사들의 자

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③ 남한의 현존하는 정권을 “광범한 인민 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미국은 분렬주의적인 ‘두 개 조선’ 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선결조건들을 제시해 놓고 있다.

북한측의 이러한 연방제 통일방식에 대하여, 대내외에서 남북간에 가로 놓여 있는 오늘의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방안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게 일어나자 김일성은 1991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잠정적으로는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쌍방간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제안 역시 최종적인 통일국가의 형태로서 한 지붕 아래 두 가정이 각기 딴 살림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두 제도 두 정부'의 연방국가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북한측이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노선의 본질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 -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측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요약해 보면 한반도의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두고 하나의 민족이란 토대 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 아래 두 개의 지역자치 정부'로 구성되는 연방국가 형태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 놓고

있다.

첫째, 남과 북에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둔 채 연방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남한의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 및 자유민주주의란 이데올로기와, 이와 정반대되는 원리에 기초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공산주의 사상(‘주체사상’)이 하나의 ‘연방’이란 엉성한 지붕 아래 함께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통일은 결코 통일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제도와 이념을 가진 채 연방방식의 통일국가가 수립된다면, 연방을 이루고 있는 남북의 지역정부에서는 각기 상이한 정책과 제도를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 통일국가로서 하나로 통합된 국가목표나 이익의 추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연방체제 아래서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게 되는

데, 남과 북이 서로 사상과 제도를 달리 하는 가운데 각자 자기 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생각을 달리 하는 조건 하에서 연방이 어떻게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어느 방향으로 대외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오늘날까지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기본적인 이념과 제도를 달리 하는 복수의 국가가 합쳐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에 와서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등 연방제 방안을 일부 수정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시사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방제의 모순점과 비현실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연방형태의 통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감정이나 전통에 비추어 보아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이 땅에 5,000년의 찬란한 역사와 함께 같은 언어, 동질적인 전통 문화를 간직한 채 지난 1,300여년 동안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어 살아 왔다.

따라서 제 2 차 대전후 강대국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초래된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 현상을 이땅에 고착시키는 연방방식의 통일은 하나의 민족사회,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기를 끝내 염원해 온 온 겨레의 한결같은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우리는 소련연방을 이루어 왔던 발트 3국의 독립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난 70여년을 지배해 온 공산주의란 이데올로기의 힘도 같은 겨레끼리 하나가 되어 자존을 되찾아 살아가겠다는 끈질긴 염원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위대한 역사의 교훈을 배웠다.

비록 뜻 아닌 국난으로 말미암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둘로 갈라져 살아온 우리지만 언젠가 하나로 다시 동아리져 오손도손

살아보겠다는 7천만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한낱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언제까지나 가로막도록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셋째,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대남 전략적 의도를 우리는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측은 연방제를 그냥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몇가지 조건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은 한마디로 대화와 협상의 상대방인 남한측의 체제와 법제도들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뒤엎고 고친 다음에야 남쪽과 연방구성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갈라져 있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 그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남조선혁명'이란 전략목표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 선전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와 통일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줄곧 권한과 책임있는 쌍방당국 사이의 협의 보다는 정당·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나, 남한내 일부 반정부·반체제인사와 단체들을 상대로 하는 『범민족대회』 등에서 논의할 것을 고집해 오고 있는데서도 그 속셈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통일방안은 남북간에 사상·이념·체제상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현실인식의 바탕위에서 『남북연합』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 정치·사회적 통합을 이룩하자는 ‘점진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과 북은 우선 서로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공존공영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가운데 잃어버

린 민족공동체를 되찾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끝내 7천만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국가를 실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방방식의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일괄타결적 접근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것이야말로 자기들의 제의가 분단 40여년간 남북간에 쌓여진 불신과 갈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이며 선전적 차원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또한 그것이 실현코자 하는 통일국가의 최종적인 형태에 있어 크게 다르다.

우리 방안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체제와 정부 아래 하나의 국가(1민족, 1국가, 1정부, 1체제)를 이루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연방제는 하나의 민족(1민족)이 연방이란 지붕(1국가)아래 두개의 지역자치 정부(2정부)가 연결되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2체제)로 나뉘어 사는 미완성의 통일국

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과 북한의 『연방제』는 엇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양자는 남과 북에 현존하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그대로 둔 채 남북의 정치·사회적 통합을 지향해 나간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남북연합』은 통일에 이르는 과도 기간 동안에만 존재하는 잠정적인 관리체제에 불과한 것인데 반하여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최종적인 통일국가의 형태로써 영속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 우리의 『남북연합』은 분단의 현실을 관리해 나가는 민족내부의 특수한 결합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틀 안에서 남과 북은 각자의 외교·군사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남게 되는 것이나, 『연방제』 아래의 남과 북은 별개의 지역정부로서

주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외교권과 군사권이 연방정부에 이양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연합」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남북정상회의」는 현직의 남북 수뇌로, 「남북각료회의」는 쌍방 정부의 각료급 대표로, 「남북평의회」는 남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측은 연방최고기구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다만 「연방회의」를 “남북에서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 수의 해외동포들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바 이같은 제안은 사실상 이들 기구에서 책임성있는 정부 당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측이 지난 60년도에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안할 때에는 연방에 두는 「최고

민족위원회」를 남북 정부의 대표로 조직하고자 주장하였으나 80년도에 들어와서부터 그 명칭과 구성방법을 위와 같이 바꾸어 놓고 있음)

이밖에 양 방안은 통일을 이룩하는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다르다. 우리는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 평화와 통일을 기약할 수 있는 기본방안과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등 통일을 이룩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은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선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헌법을 만들어 민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통일국가를 세워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측은 제 정당·사회단체와 해외동포들이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같은 군중집회식 연석회의를 열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확정하고, 연방기구를 조직하여,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케 하며, 관련 문제들을 총괄케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떤 통일방안이 우리 거래 모

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의 기준은 그 방안이 지니는 합리성과 실현가능성, 민족적 합의성 여부에 두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중 어느 쪽이 선택되어야 하는가가 스스로 분명해 진다고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비교

구 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전제조건	없 음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체제	남북연합	없 음
과도기구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없 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거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 협의, 결정
통일국가 기 구	양원제 국회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 정책기조	민주공화체제,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 증진, 민족의 항구적 안전 보장, 외국과 선린우호관계 유지	자주적 정책실시, 민족경제 발전보장, 민족문화·교육의 통일적 발전, 민족연합군 조직, 평화애호적 대외 정책 등 10대 시정방침
통일국가의 형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단일 민주국가	'2 체제, 2 정부'의 연방형 중립국가